

# “國家의사결정과정에 이공계 참여 늘려라”

## 참여와 변화에 뒤처진 행정부 인사 개혁 시급하다

주제발표 | 한민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21세기는 '정보와 과학중심의 지식기반 사회'와 '다원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지식기반과 다원화 사회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며, 따라서 국가 전체 또는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은 다양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이공계 출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비전 중 하나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선정하였고 노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치사에서 "이공계 출신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뤄낼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투자액을 증액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공계 출신들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가 부진한 원인과 이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공계 채용 확대 ... 다양성 · 정보화 이끌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공계 출신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첫번째 방안은 이공계 인력을 공직에 많이 진출시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고급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인력을 많이 뽑아주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의 전문화·보

편화 현상의 확대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과학기술자 및 기술정책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고등고시 채용인력 확대 등 이공계 인력임용을 확대하고, 직렬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다양한 부처와 부서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과학기술 전문가그룹을 의사결정과정에 대폭 참여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계획, 예산 등을 포함한 관련위원회에도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여성인력의 경우 30% 할당제가 시행중인테이와 유사한 할당제 도입도 필요하다.

세번째는 이공계 대학의 교육을 개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공계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의 단순지식의 암기식 주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공계 인력의사결정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전공지식과 더불어 폭 넓은 소양을 갖춘 통합적 사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공계 학부과정 이수 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행정대학원이나 경영대학원으로의 진출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현재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고시공부로 전환하는 비효율적인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의사결정과정에 이공계 출신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춘 필연적인 현상이다.